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한 국 사 회 보 험 연 구 소

# 目 次

## I. 검토 배경 / 1

## II. 예술인 복지제도의 필요성 / 2

1. 예술인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2. 예술인 사회보장의 현주소
3.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

## III. 예술인 공제제도의 모색과 기본방향 / 16

1. 예술인 복지제도 구축의 환경
2. 주요 공제제도 및 공제사업 검토
3. 예술인을 위한 공제사업 검토
4. 예술인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방향

## IV. 예술인 공제제도의 구축방안 / 31

1. 예술인공제회 가입 범위 및 규모
2. 유니버설 공제 (universal mutual aid)
3. 독립성 공제 상품의 개발
4. 예술인공제회의 재원조달
5. 공제회 사업조직
6. 법률안 개정방법 검토

## I. 검토 배경

□ 예술인의 대부분이 취약한 생활여건 속에서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들 제도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 및 취업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의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음.

□ 인구 고령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의 개선없이 문화예술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도 어려움.

- 그동안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는 있어 왔지만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예술인공제사업의 추진이 신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음.

- 본 연구는 예술인공제회 기본설계를 통한 공제회 설립·운영방안 도출을 통하여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II. 예술인 복지제도의 필요성

### 1. 예술인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 □ 예술인 취업형태의 불안정성

- 예술인의 취업형태는 자유전문직이 42.7%로 가장 많고, 정규고용직이 30.5%, 고용주가 17.0% 임시고용직이 9.8%로 구성되어 있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주와 정규고용직 비율이 낮고 자유전문직과 임시고용직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임시고용직 비율이 높게 나오고 60세이상의 경우는 자유전문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유전문직과 임시고용직이 비율이 높은 것은 취업의 불안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표 1〉 예술인의 취업형태

	사례수	고용주	자유 전문직	정규 피고용직	임시 피고용직	계
전체	(600)	17.0	42.7	30.5	9.8	100.0
○ 성별						
남자	(425)	21.2	39.3	32.2	7.3	100.0
여자	(175)	6.9	50.9	26.3	16.0	100.0
○연령별						
20-29세	(56)	0	35.7	35.7	28.6	100.0
30-39세	(92)	10.9	35.9	42.4	10.9	100.0
40-49세	(153)	24.2	3.4	38.6	5.9	100.0
50-59세	(149)	22.8	35.6	33.6	8.1	100.0
60세이상	(150)	14.0	68.0	10.0	8.0	100.0

- 장르별로 보면, 건축부문에서는 고용주의 비율이 높고, 문학 미술 사진 국악 음악 영화 연예 등에서는 자유전문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축 무용 연극 분야에서는 정규고용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무용에서 임시고용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분야별로 보면, 대중예술은 전문자유직 비율이, 공연예술은 정규피고용직 비율

이 높은 반면, 문학 및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임시고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 직업유형별로 보면, 경영기술행정 직역은 정규피용자 비율이 70%대로, 교육직역에서도 정규피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창작예술가 및 실연예술가는 자유전문직 비율이 높게 나왔음.

#### □ 예술을 통한 소득의 불충분성

- 예술인의 연평균 소득을 보면, 가구전체의 소득은 4,267만원으로 일반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2,976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69.7% 수준임. 이중 예술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본인 소득의 50.5%인 150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개인기준으로 볼 때,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58.4%로서 가구소득의 격차보다는 현격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연평균 소득 현황

응답내용	사례수	개인연평균소득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가구 전체소득
전체	(600)	2976.44	1504.49	4266.78
○성별				
남자	(425)	3381.39	1692.74	4300.05
여자	(175)	1977.89	1041.81	4178.60
○연령별				
20-29세	(56)	1447.96	1167.14	3490.87
30-39세	(92)	2193.88	1532.84	3726.25
40-49세	(153)	3666.43	2083.40	4837.04
50-59세	(149)	3704.22	1470.86	4931.27
60세이상	(150)	2636.17	1069.81	3601.95

주1) BASE: : 전체

- 개인연평균소득 기준으로 볼 때, 장르별로 보면 건축이 5,545만원으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악이 1,824만원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분야별로 보면, 문학 및 시각예술이 타 분야에 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자유전문직이 임시고용직보다 낮은 1,913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어 자유전문직이라고 답한 상당수의 사람이 사실상 임시고용직보다 나은 고용상태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주 직업 유형별로 보면, 교육직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창작 예술가는 교육직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 예술인 소득의 단속성이 가장 큰 문제

-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의 활동기간을 보면, 12개월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람 4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예술인 중 58.2%는 소득의 단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 수록 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12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0대와 4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대의 경우는 5개월 이하 활동기간으로 보면 30대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3〉 예술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활동 기간

응답내용	사례수	없음	5개월이하	6-11개월	12개월	무응답	평균: (개월)
전체	(600)	31.3	16.7	9.8	41.8	3	(6.21)
○성별							
남자	(425)	30.6	17.4	8.5	43.1	5	(6.30)
여자	(175)	33.1	14.9	13.1	38.9	0	(6.01)
○연령별							
20-29세	(56)	14.3	25.0	14.3	46.4	0	(7.34)
30-39세	(92)	18.5	12.0	13.0	56.5	0	(8.26)
40-49세	(153)	26.8	13.7	9.2	50.3	0	(7.03)
50-59세	(149)	40.9	12.8	10.1	35.6	7	(5.33)
60세이상	(150)	40.7	23.3	6.7	28.7	7	(4.56)

주1) BASE : 전체

- 장르별로 보면, 소득이 없는 비율은 사진 미술 영화가 50%내외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분야별로 보면, 공연예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음.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피고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없음이 29.5%, 고용주인데도 소득없음이 43.1% 였고 5개월 미만 기준으로 보아도 고용주는 50%대, 정규피고용직은 40%로 나타다 외형상으로 고용주 혹은 정규피고용자라고 답했다고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심각한 소득 단속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구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인 것으로 판단됨.

## 2. 예술인 사회보장의 현주소

□ 주요 사회적 위험을 실업, 재해, 질병, 노령으로 크게 분류할 때,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보장하는 제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있음.

-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가입여부 및 수급여부는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고용보장

- 실업의 위험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가입여부를 살펴본 결과 66.7%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답하고 있음. 33.3% 실업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자유전문직의 99%와 임시고용직의 80%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낮으며, 대중예술의 고용보험 미가입율은 90%를 넘고 있음. 100만원이하 소득자의 93%가 고용보장에도 노출되어 있음.

〈표 4〉 고용보험 가입여부

응답내용	사례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있지 않음	계
전체	(600)	33.3	66.7	100.0
○성별				
남자	(425)	36.5	63.5	100.0
여자	(175)	25.7	74.3	100.0
○분야별				
문학 및 시각예술	(240)	40.0	60.0	100.0
공연예술	(241)	39.4	60.6	100.0
대중예술	(119)	7.6	92.4	100.0
○고용형태별				
고용주	(102)	31.4	68.6	100.0
자유전문직	(256)	0.4	99.6	100.0
정규피고용직	(183)	84.7	15.3	100.0
임시피고용직	(59)	20.3	79.7	100.0
○개인월평균소득별				
100만원이하	(172)	7.0	93.0	100.0
101-200만원	(109)	26.6	73.4	100.0
201-300만원	(103)	42.7	57.3	100.0
301만원이상	(174)	58.0	42.0	100.0
무응답	(42)	33.3	66.7	100.0

□ 재해보장

-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함께 관리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산재보험 보호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5〉 산재보험 적용여부

응답내용	사례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있지 않음	계
전체	(600)	33.3	66.7	100.0
○성별				
남자	(425)	36.5	63.5	100.0
여자	(175)	27.4	72.6	100.0
○분야별				
문학 및 시각예술	(240)	40.4	59.6	100.0
공연예술	(241)	40.2	59.8	100.0
대중예술	(119)	7.6	92.4	100.0
○고용형태별				
고용주	(102)	33.3	66.7	100.0
자유전문직	(256)	0.8	99.2	100.0
정규피고용직	(183)	84.7	15.3	100.0
임시피고용직	(59)	20.3	79.7	100.0
○개인월평균소득별				
100만원이하	(172)	8.7	91.3	100.0
101-200만원	(109)	26.6	73.4	100.0
201-300만원	(103)	42.7	57.3	100.0
301만원이상	(174)	58.0	42.0	100.0
무응답	(42)	33.3	66.7	100.0

주1) BASE : 전체

□ 건강보장

-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보장율이 높은 부분은 건강보험임. 98.2%가 보호받고 있음. 지역가입자 비율이 44.7% 수준임.
- 그런데 건강보장의 보장은 보험가입 여부보다는 진료시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능력이 문제가 됨.
-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29.1%



가 피부영자 자격으로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에 적용받고 있음.

〈표 6〉 건강보험 가입여부

응답내용	사례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급 여(1종)	의료급 여(2종)	가입되 어있지 않음	무응답	계
전체	(600)	53.5	44.7	0.3	0.5	0.8	0.2	100.0
○고용형태별								
고용주	(102)	40.2	56.9	2.0	0.0	10.	0.0	100.0
자유전문직	(256)	31.6	66.8	0.0	1.2	0.0	0.4	100.0
정규피고용직	(183)	93.4	6.6	0.0	0.0	0.0	0.0	100.0
임시피고용직	(59)	47.5	45.8	0.0	0.0	6.8	0.0	100.0

주1) BASE : 전체

#### ☐ 노후소득보장

- 고용상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가입율은 의외로 높게 나타났음. 국민연금에 53.0%가 가입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18.1%가 가입하고 있어 미가입자는 29.8%였음. 특수직역연금에의 가입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자중 공적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대중예술인의 미가입율이 높았으며 임시피고용직과 자유전문직의 미가입율이 높은 상태임. 취업 불안정층에서 공적연금 미가입율도 높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실연예술가의 미가입율이 높으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의 미가입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7〉 공적연금 가입여부

응답내용	사례수	국민연금(직장)	국민연금(지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되어있지않음	계
전체	(600)	24.8	27.2	14.3	3.5	0.3	29.8	100.0
○성별								
남자	(425)	26.8	26.6	15.8	3.3	0.5	27.1	100.0
여자	(175)	20.0	28.6	10.9	4.0	0.0	36.6	100.0
○연령별								
20-29세	(56)	26.8	14.3	8.9	0.0	0.0	50.0	100.0
30-39세	(92)	30.4	20.7	13.0	20.2	10.1	33.7	100.0
40-49세	(153)	33.3	31.4	11.8	3.3	0.0	20.3	100.0
50-59세	(149)	24.2	31.5	15.4	4.7	0.0	24.2	100.0
60세이상	(150)	12.7	27.3	18.7	4.7	1.3	35.3	100.0
○분야별								
문학및시각예술	(240)	32.5	25.8	18.3	5.0	0.8	17.5	100.0
공연예술	(241)	24.9	23.7	16.2	3.7	0.0	31.5	100.0
대중예술	(119)	24.9	23.7	16.2	3.7	0.0	31.5	100.0
○고용형태별								
고용주	(102)	33.3	44.1	1.0	0.0	0.0	21.6	100.0
자유전문직	(256)	2.3	39.5	9.8	1.2	0.8	46.5	100.0
정규피고용직	(183)	53.6	3.8	30.1	9.3	0.0	3.3	100.0
임시피고용직	(59)	18.6	16.9	8.5	1.7	0.0	54.2	100.0
○주직업유형별								
창작예술가	(351)	24.5	30.2	15.7	2.6	0.6	26.5	100.0
실연예술가	(147)	18.4	30.6	7.5	0.0	0.0	43.5	100.0
경영·기술·행정	(50)	48.0	8.0	28.0	0.0	0.0	16.0	100.0
교육자	(52)	23.1	15.4	11.5	23.1	0.0	26.9	100.0
○개인월평균소득별								
100만원이하	(172)	7.6	30.8	5.2	0.0	1.2	55.2	100.0
101-200만원	(109)	22.9	32.1	14.7	0.9	0.0	29.4	100.0
201-300만원	(103)	34.0	28.2	18.4	0.9	0.0	17.5	100.0
301만원이상	(174)	38.5	17.2	22.4	9.2	0.0	12.6	100.0
무응답	(42)	21.4	38.1	7.1	4.8	0.0	28.6	100.0

주1) BASE : 전체

□ 사회보험 급여 수급실태

- 연금 또는 실업급여 수급은 60세 이상자의 44.7%가 연금을 수급하고 55.3%가 미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면 미수급 비율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 우려됨.

〈표 8〉 연금 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응답내용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600)	11.7	88.3	100.0
○성별				
남자	(425)	15.3	84.7	100.0
여자	(175)	2.9	97.1	100.0
○연령별				
20-29세	(56)	0.0	100.0	100.0
30-39세	(92)	0.0	100.0	100.0
40-49세	(153)	0.0	100.0	100.0
50-59세	(149)	2.0	98.0	100.0
60세이상	(150)	44.7	55.3	100.0

-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43만원 내외, 특수직역연금은 183만원 수준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9〉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급액

응답내용	사례수	국민 연금	특수직역 연금	퇴직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자 훈련	산재 보험
전체	(70)	43.47	182.60	300.00			
○성별							
남자	(65)	41.14	178.48	300.00			
여자	(5)	70.67	230.00				
○연령별							
50-59세	(3)	70.00					
60세이상	(67)	41.20	182.60	300.00			
○개인월평균소득별							
100만원이하	(17)	31.50	34.00				
101-200만원	(20)	57.82	126.33	300.00			
201-300만원	(15)	36356	214.50				
301만원이상	(15)	38.86	293.75				
무응답	(3)	100.00					

□ 종합 검토

-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연금 등에서의 예술인의 보장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불안정한 취업상태가 불안한 소득수준으로, 다시 사회안전망에 있어서도 취약한 보장상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다시 말하면, 예술인에 있어서도 직장이 안정적이면 소득도 안정적이고 4대 사회보험의 보장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반면에 직장이 불안정적이면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예술인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다 할 수 있음.
- 성별로 여성이 취약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불안하게 나타난 반면에, 분야별로 보면, 대중예술계가 취약하며,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시피고용자, 자유전문직, 고용주 순으로 불안하게 나타났음.
- 사회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능력이 없으면 보장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후의 소득도 불안하게 되므로, 예술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당수의 예술인이 취약한 취업상태에서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술인을 위한 특별한 사회안정망의 구축이 필요한 바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 3.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

#### 가. UNESCO의 권고

□ 문화예술인의 지위 및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UN 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가 1980년 10월 27일 제1차 총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Artists)”를 채택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동 권고는, “예술의 정력과 활력은 문화예술인의 개별적, 집단적 복지에 좌우되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기준이 문화예술인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문화예술활동의 특수한 여건으로 고려하지 않고 문화예술인 혹은 특정부류의 문화예술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들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여타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함. 대다수 회원국에서의 문화예술인들의 상황은 특히 인권,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그들의 고용조건과 관련해서 불안한 실정인 바, 이를 시정하여 재능을 개발하고 꽃피우는데 필요한 여건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화정책 및 문화발전 활동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생활의 질의 향상에 문화예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적절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당국의 행동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담고 있음 (최진욱, 2007).
- 결국 동 권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문화예술인들이 사회 및 문화 발전에 대한

공로를 고려하여 이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sup>1)</sup>

- 동 권고가 채택된 이후, 프랑스와 독일을 대표로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UNESCO 권고의 내용을 자국의 사회정책 전통에 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및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나. EU의 권고

□ EU(2006)는 EU 회원국내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각 회원국이 과거의 조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각 회원국들이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법적·직업적 문제를 다루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것이 자국의 법 및 정치 체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법률 및 조직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 문화예술인 개인의 계약 관계의 명확화, 소규모 문화예술 기업의 욕구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와 조치의 마련
- 문화예술인에게 필요한 법률, 행정, 사회보장 및 세제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설립
- 신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 - 저리 혹은 무이자 대출 제공, 재료·장비 및 교육에 대한 지원 등 - 의 도입
-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정보 제공

---

1) 문화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보장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장점)에 기반한 접근(merit-based approach)'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EU, 2006), 이는 Gilbert & Terrel(2006)의 사회복지 자원 할당의 네 가지 원칙 중 '보상(Compensation)에 근거한 할당'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박경일, 2008).

□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권고 및 결정 사항 - EU Services Directive, Barry banks Decision, Commission/France Decision 등 - 을 자국에 완전히 적용하여 자영업 문화예술인들에게 사회보장 급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조치가 각 국의 고유의 사회보장체제 (social security regime)와 더 잘 연계되도록 하되,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사회 보험 기여의 중복 혹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다양한 고용 상태(임금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조화에 대한 이러한 원칙은 개별 사회보험의 기여 및 피보험 기간의 합산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해당 문화예술인 개인의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함.

다. 주요 선진국의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에 대한 대표 사례

□ 일부 선진국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대안적인 조치로서 자영업 문화예술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한 조치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사회보장체제의 도입부터 문화예술인, 특히 고령 문화예술인에게 소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인 조합의 운영 등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함.

-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피고용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자영업 문화 예술인까지 확대(벨기에)
- 자영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의료 및 연금 분야를 포괄하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수립(독일)
- 문화예술인 대상의 실업보험, 작가와 창조적(creative)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의료 및 연금 분야를 포괄하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도입(프랑스)
- 공연 예술인(performing artists)을 대상으로 의료 및 연금 분야를 포괄하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이탈리아)
- 소득 최저임금 미만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부조 도입(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 자영업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업보험 적용(덴마크)

#### 라.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

□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최근에 와서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기는 했으나, 사회보장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임.

- 특히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직종별 구분이 없는 국민통합형 제도로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이에 반해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고용형태 및 종사지위에 있어 비정규 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분류됨으로써, 현행 사회보험제도로부터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기존 사회보험제도 체계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임금근로자로서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혹은 자영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자영업자 신분의 문화예술인들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불 능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문화예술인들이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용자 주체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업의 경제적 영세성에서 비롯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사회보험 분담금 지불 능력 부재에 따른 사용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피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의 사회보험 편입 가능성도 더 불어 위축되고 있음.
- 특히, 4대 사회보험 중에서도 현재 및 미래의 소득보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규석, 2007).

□ 예술인 공제사업 개념 정립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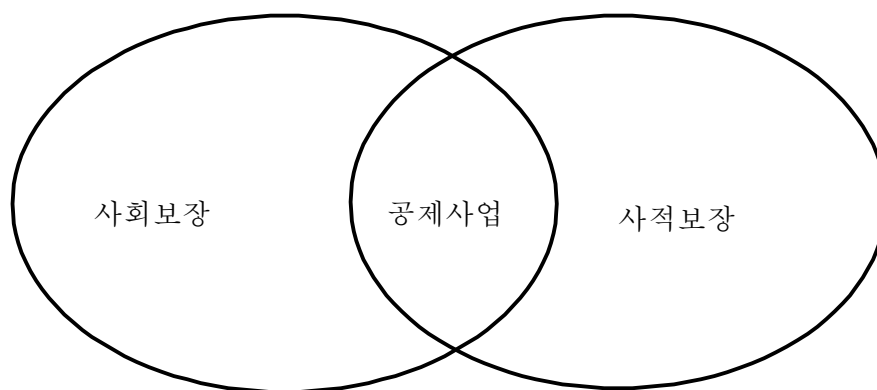
-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 등으로 거시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은 완성되었으나 미시적인 분

야에 있어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다양하게 분출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의 확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제사업의 개념은 소모적·수동적·제한적·공급자중심이었던 기존의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중심의 복지로의 전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 □ 공공 근로복지의 위상의 정립

- 공제사업은 정부책임의 사회보장과 개인책임의 사적보장과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보장과 사적보장의 교집합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양자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자에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공제사업이 위치함.
- 따라서 공제사업의 영역은 대상계층층의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서 달리 설정될 것임. 사회복지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공제사업의 복지욕구 충족으로 위치 이동.



[그림 1] 공제사업의 위상

#### □ 사회보장은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서 기업복지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실현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다름.

- 공제사업은 사회보장과 사적보장의 중간에서 다양한 미실현 복지욕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복지	중소기업복지	영세기업복지	비정규직복지	실업자등	⇒자아실현(불만족)
					⇒생활안정(불안정)
		영세기업복지	비정규직복지	실업자등	⇒고용 유지(실업)
					⇒생계유지(무소득)

[그림 2] 대상별 공제사업에 대한 needs의 격차

#### □ 새로운 예술인복지 시스템의 필요성

- 대부분의 예술인은 기존의 사회보장을 통해 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공제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체계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에에 대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
- 공제사업은 예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한번에 경영해 나갈 수 없으므로, 사업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지향적 사업(소프트웨어)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Ⅲ. 예술인 공제제도의 모색과 기본방향

#### 1. 예술인 복지제도 구축의 환경

☐ 예술인이 사회적 위험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

- 예술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은 예술인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예술인의 길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직에 은퇴하고 그 이후 사망시까지 예술인이 해결하여야 할 각종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술인 직역에서도 일반적인 실업, 재해, 질병, 고령 등 사회적 위험이 존재함.

-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업, 재해, 질병 위험이 존재
- 은퇴기간에 대해서는 질병, 고령위험이 존재

〈표 10〉 예술인 인생주기별 사회적 위험

위험종류	근로기간	은퇴기간
실업위험	유	무
재해위험	유	무
질병위험	유	유
고령위험	무	유

☐ 사회보험으로서 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한계가 있음.

- 고용보험 적용율 : 33.3 %, 산재보험 적용율 : 33.3 %
- 건강보험 적용율 : 99.2 %, 공적연금 적용율 : 70.2 %

〈표 11〉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술인 보장수준

위험종류	사회안전망	적용율
실업위험	고용보험	33.3 %
재해위험	산재보험	33.3 %
질병위험	건강보험	99.2 %
고령위험	공적연금	70.2 %

□ 4대 사회보험은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계층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잔존

- 예술인중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의 안정성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50% 수준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50%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음.

□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일정하게 받는 대상으로 농어민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예술인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농어민에 대해서는 우루구아이 라운드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995년 국민연금의 농어민 확대시 보험료의 1/3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달성되어야 함. 첫째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대의 확보이고, 두 번째는 지급대상자의 식별가능성임
- 현재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엄격한 예술인의 범주를 설정하기도 곤란함.
- 특히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특자금이라는 다소는 안정성이 있는 재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음.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인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이 전국민의 30-40%상당 존재하고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 등), 이들 계층 중 예술인만을 특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임.
- 따라서 예술인만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율적인 지역 종사자를 위한 상호부조제도를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욕구에 적합한 제도적 틀로서 공제제도 (mutual aid)를 검토할 수 있음.
- 사회보험이 오래전에 정립된 유럽의 경우 공제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전단계로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음. 국가에 따라서 공제제도가 사회보험제도의 전신으로 역사성을 강하게 지닌 국가들도 존재함.

□ 공제제도는 相互扶助・患難相恤의 정신에 의거하여 다수의 회원이 일정금액을 각출・적립하여 운영되는 자주적 제도임.

- 공제사업은 다수의 회원이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경제적 재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는 집단적 위험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본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의 경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부조 행위로서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과 함께 운영주체 및 준거법률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공제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중간적 위치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표 12〉 국내 민영보험 및 공제제도 비교

구 분	보 험	공 제
법적근거	보험업법	특별법 또는 민법
감독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특별법에서 정한 주무부서
가입대상	불특정다수	특정집단
판매채널	모집인, 대리점, 중개인 등	회원
법인의 구성원	주주(주주≠계약자)	회원(회원=계약자)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회원총회
가입목적	위험의 전가	상호부조
잉여금귀속	주주	회원
손·생보 검영	검영불가	검영가능
책임준비금규제	보험업법 적용	공제기관별로 달리 적용

자료 : 보험개발원, 2002

□ 공제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 보험 등의 일반 금융 제도와는 달리 수익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세법에 의해 세제 혜택 수혜 가능

- 또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제사업의 특성상 회원들은 운영주체로부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금지로 안정된 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인 공제제도를 예술인의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대안으로 검토 가능할 것임.

## 2. 주요 공제제도 및 공제사업 검토

□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제회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공제회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이 존재하고 있음.

〈표 13〉 주요 공제회의 운영현황

공제회 명	설립일	설립근거	대상	회원수 (천명)	자 산 (억원)
교원공제회	1971.2.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공무원	681	99,0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5.2.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지방공무원	234	17,000
군인공제회	1984.2.1.	군인공제회법	하사관 이상 군인	156	37,000
대한소방공제회	1984.10.1.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공무원	22	1,100
경찰공제회	1989.10.1.	경찰공제회법	경찰공무원	88	8,000
과학기술인공제회	2003.6.1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등	3.4	513

□ 각 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저축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제회 운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인공제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제회의 경우 가입대상의 식별이 명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공제회 혹은 공제조합은 특별법 혹은 특정법에 그 실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제회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공제회의 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법령과 정관 등을 근거로 하여 수행하고 있음.
- 공제회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원 혹은 회원의 자율적인 조직체라고 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인공제회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존재
- 공제회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민영보험의 규제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보험업법에의 적용은 배제되고 있음.
- 공제회에 자산이 증대되면 군인공제회 등과 같이 유력 투자기관으로서 발전하기도 함.
- 일부 공제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제회 가입대상은 소득이 안정적인 직군임

〈표 14〉 주요 공제회의 서비스 현황

기 관 명 (설 립 일)	주요상품		복지 서비스
	상품명	이율	
한국교직원공제회 (1971. 3. 16)	장기저축급여	5.5%	결혼·퇴직기념품, 주택재해부조금, 상병급여, 유족급여, 출산보조금, 의료할인, 휴양시설 제공 등
	목돈급여(정기예금)	5.25%	
	대 여	6.5%	
	각종 보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5. 2. 1)	퇴직급여	5.75%	사망/요양/재해 급여, 의료, 숙박, 장례, 예식장 할인
	대출상품	6.25%	
	한아름목돈예탁(정기예금)	5.40%	
	회원급여저축	7.0%	
군인공제회 (1984. 2. 1)	목돈수탁저축(정기예금)	5.8%	출산보조금, 대입축하금, 재해위로금, 전역기념품 주택사업 등
	대여상품	5.9%	
	퇴직급여	7.0%	
	생활안정자금대여	6.0%	
경찰공제회 (1992. 10. 24)	퇴직급여	6.0%	사망/순직, 특별순직, 공상요양급여, 결혼/출산 부조금
	생활안정자금대여	6.5%	
	적립형 공제급여	6.0%	
	퇴직연금사업	-	
소방공제회 (1984. 11. 10)	대여사업	5.9%	순직/사망/공상급여, 장학사업, 복지카드발급
과학기술인공제회 (2003. 6. 17)			휴양, 의료 할인 복지카드 준비 중

〈표 15〉

구 분	미국(뉴욕주)	캐 나 다	영 국	일 본
사업주체	협동조합, 공제조합	공제조합	공제조합	협동조합, 공제조합
감독관청 (Licensing)	보험감독당국	금융기관감독청	공제조합위원회 → FSA로 이관*	주무관청
법적근거	보험법 제45절	보험회사·공제조합에 관한 법률	금융서비스법 공제조합법	특별법, 민법
구분계리	법상 규정	법상 규정	법상 규정	최근 규정하는 추세임
책임준비금 규제	보험사와 동일	보험사와 동일	보험사와 유사	보험사와 다름
자산운용규제			보험사와 유사	보험사와 다름
모집규제			보험사와 동일	보험사와 다름
검사권			보험사와 동일	주무관청 장관
업무개선명령권			포괄적 명령권 있음	주무관청 장관

주1)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영국 금융감독청)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방안」, 2002. 7

## □ 한국교직원공제회

### 가. 일반현황

- 가입자격
  - 일반회원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 공제회의 임·직원
  -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서 정년·명예·상병 퇴직자 또는 임기만료 퇴직자
    - 일반회원으로서 만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일반회원으로서 10년이상 가입하고 퇴직한 만55세 이상인자
- 자산규모 : '06년말 기준 총 자산규모 13조 4,100억원
- 총 회원수 : '06년말 기준 총 회원수 72만 3,436명



[그림 3]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및 자산 변동 추이

#### 나. 주요사업

구 분	급여율	내 용	
장기저축 금 여	연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제도</li> <li>가입구좌 : 1구좌 - 500구좌(600원 - 300,000원)</li> </ul>	
목 돈 금 여	연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중 회원의 목돈을 증식시켜주는 저축제도</li> <li>가입구좌 : 1구좌 - 100구좌(100만원 - 1억원)</li> </ul>	
퇴직생활 금 여	연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회원의 목돈을 증식시켜주는 저축제도</li> <li>가입구좌 : 1구좌 - 60구좌(500만원 - 3억원)</li> </ul>	
대여사업		생활자금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자금 대여(일반대여)</li> <li>대여한도 : 2,000만원~5,000만원</li> <li>대여이율 : 연 6.5%</li> </ul>
		무이자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자금, 재해복구자금</li> <li>대여한도 : 보건의료자금 - 500만원 재해복구자금 - 1,000만원</li> </ul>
		교원복지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li> <li>대여한도 - 전세자금 3,000만원 자녀결혼자금 1,500만원</li> <li>대여이율 : 연 6.5%(정부보조 50%로 인해 회원 실질이율 3.25%임)</li> </ul>



다. 회원복지 서비스

구 분	내 용
무상 부조금	o 결혼·퇴직 기념품 o 주택·재해 부조금 o 상병 급여금 o 유족 급여금 o 출산보조금
복지시설 이용	o 의료기관 할인 서비스 o 회원 법률 상담 서비스 o 호텔·콘도 할인 서비스 o 음식점 무료제공 o 장례식장 할인 서비스
기 타	o 복지카드 발급 - 교직원복지카드, 신한교직원공제회카드, 비씨교직원공제회카드

라. 기금운용 현황('06년 기준)

☐ 총 자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유가증권	대 여	개발사업 투 자	유·무형 자 산	현금·예금	기 타	합 계
금 액	63,089	38,323	22,767	4,984	711	4,236	134,110
비 율	47.0%	28.6%	17.0%	3.7%	0.5%	3.2%	100.0%

☐ 기금운용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유가증권	대 여	개발사업	보험사업	임대사업	기 타	합 계
금 액	4,606	2,426	1,140	591	161	882	9,807
비 중	47.0%	24.8%	11.6%	6.0%	1.6%	9.0%	
수익률	총 운용 수익률 : 7.30%						

☐ 회원 지급준비율 : 97.7%

☐ 개발사업 현황

- 신공항 하이웨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신분당 전철, 용인경전철 등 장기 안정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신규 SOC사업부문 투자

#### □ 산하사업체 현황

- 대교개발(주), (주)교원나라 제주호텔,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주)교원나라벤처투자, 교원나라레저개발(주), 천마개발(주), (주)서드에이지

#### □ 대한소방공제회

##### 가. 일반현황

- 가입자격
  - 일반회원
    - 소방 공무원
    -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공제회의 임·직원
  - 특별회원
    -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일반회원으로 미가입된 공무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 퇴직회원
    -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 중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
- 자산규모 : '06년말 기준 총 자산규모 1,812억원
- 총 회원수 : '06년말 기준 총 회원수 2만 5,278명

나. 주요사업

구 분	급여율	내 용
퇴직급여	연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제도</li> <li>가입구좌 : 5구좌 이상(5,000원 이상)</li> </ul>
순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수행 중 순직한 회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받은 경우 무상 지급</li> <li>지급액 : 100만원~200만원</li> </ul>
사망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이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무상 지급</li> <li>지급액 : 60만원~100만원</li> </ul>
공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를 받은 경우</li> <li>지급액 : 20만원~40만원</li> </ul>
대여사업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여한도 : 1인당 100만원~1억원까지</li> </ul>

다. 회원복지 서비스

구 분	내 용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li> </ul>
특별위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원 회원</li> <li>지급액 : 순직 - 소방위 5호봉 월급액의 18개월분 공상 - 소방위 5호봉 월급액의 3개월분</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카드 발급 - 119소방사랑 카드</li> </ul>

라. 총 자산 및 수익현황('06년 기준)

- 회원 지급준비율 : 101. 2%

(단위 : 억원)

구 분	금융자산	대체투자금	회원대여금	부동산	미수이자 등	합 계
금 액	1,427	150	60	87	88	1,812
비 율	78.7%	8.3%	3.3%	4.8%	4.9%	100.0%
수익률	총 운용수익률 : 7.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 일반현황

- 가입자격
  - 일반회원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 행정자치부 및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행 정조정실, 기타 타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특별회원
    - 공제회의 회원으로 있던 분이 정년 또는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는 한아름목돈예탁에 가입하여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코자 하는 자
- 자산규모 : '06년말 기준 총 자산규모 29,744억원
- 총 회원수 : '06년말 기준 총 회원수 21만 9,172명

나. 주요사업

구 분	급여율	내 용
퇴 직 급 여	연5.5%	o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제도 o 가입금액 : 월 10,000원~700,000원
한 아 름 목돈예탁	연5.40 %	o 회원의 목돈을 예치하는 상품(정기예금 품) o 가입금액 : 500만원~3억원
대여사업	6.0%	o 대여한도 : 1인당 100만원 이상

다. 회원복지 서비스

구 분	내 용
사망급여	o 회원이 재직 중 재난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o 지급액 : 20만원~120만원
요양위로금	o 회원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14일 이상) 치료 시 o 지급액 : 20만원
재해급여금	o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회원 본인의 거주 가옥이 소·유실된 경우 o 지급액 : 50만원~200만원
기 타	o 복지카드 발급 - 스마트 카드

라. 기금운용 수익 현황('06년 기준)

• 총 자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금융상품	기업투자	개발사업	대여금	부동산 등	합 계
금 액	19,614	2,124	2,206	4,826	974	29,744
비 율	66.0%	7.1%	7.4%	16.2%	3.3%	100.0%

• 기금운용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금융상품	대 여	개발사업	기업투자	사업소등	합 계
금 액	1,489	307	62	166	160	2,184
비 중	68.2%	14.1%	2.8%	7.6%	7.3%	
수익률	총 운용 수익률 : 8.60%					

• 개발사업 현황

- 아산배방 개발사업, 광명 역세권 개발, 주택가 공동주차장, 두바이 부동산 펀드 등 장기 안정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신규 SOC사업부문 투자

• 기업투자 현황

- LG카드 M&A 참여, 대우건설 M&A 참여 등

〈표 16〉 공제회 지급준비율 현황

구 분	한국교직원 공제회	대한소방 공제회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급준비율	97.7%	101.2%	90.5%	116.3%	117.2%

### 3. 예술인을 위한 공제사업 검토

가. 사업항목 검토

☐ 예술인에 필요한 주요 복지 항목

- 근로기간 중의 소득 중단시 생계비
- 근로기간 중 재해발생시 치료비와 생계비
- 근로기간 중 중증질환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 은퇴후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저축 사업
- 예술인 사업체 퇴직연금 사업

☐ 예술인에 필요한 부가적 복지항목

- 예술인 관련 구인구직 서비스
- 예술인 주택사업
-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서비스
- 기타 예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나. 사업 실행 장애 요인 검토

☐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예술인이 50% 내외 존재

- 자유전문직, 임시피고용직으로 직업이 불안정함.
- 회비 혹은 공제료를 매월 납입하기 어려움.
- 납입할 있다 하여도 금액의 한도가 존재함.
- 현재 생활의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상이 공제제도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함

☐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아니함.

- 자유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없음
- 임시피고용직의 경우에도 주된 사용자를 정하기 어려움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전액 혹은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함

☐ 예술인의 범주를 한정하기 어려움.

- 문화예술인의 범주는 매우 넓어서 이를 규정하는 법률도 다수 존재
- 법에 정한 범주를 정한다고 하여 예술인 직업의 특성상 유동성이 높음

□ 예술인 지원 예산의 확보 어려움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 예술인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함.
- 예술진흥기금을 예술인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 존재

#### 4. 예술인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방향

□ 예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면서 복지사업 수행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새로운 대안의 구상이 필요함.

- 분절적인 사업으로는 예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예술인 복지욕구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상이 필요함.

□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예술인의 전생애 주기별 복지욕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유니버설 공제제도 (universal mutual aid) 창안을 제안함.

- 유니버설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 유니버설 공제는 공제료 불입금액과 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허용하여 직장 단속이 빈번한 예술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필요한 만큼 적립하고,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공제료를 불입하지 않아도 되게 설계함.
- 유니버설 공제는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투자방법의 선택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 유니버설공제는 불입한 금액의 원리금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 실업시 실업급여, 상해시 치료비 및 생활비 지급, 질병시 본인부담금 등 지급, 은퇴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한 연금을 지급함.
-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는 별도로 보험적 성격의 사망일시금 및 장애급여를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급함.

□ 유니버설 공제제도 이외에도 예술인의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퇴직연금공제

를 별도로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퇴직연금 사업
- 예술인 관련 구인구직서비스
- 기타 예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 예술인 공제사업은 예술人公제회 설립 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하부의 공제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 공제사업 내용, 예술인 공제회의 구성,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입안
- 예술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고안

□ 예술인 공제사업의 사업 특성

- 공제사업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대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개별성(individual) :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집단적(collective)으로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인 구별 없이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집행하는 방식이라면 공제사업은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개별적 제도.
- 둘째, 유연성(flexible) :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이 획일적(inflexible)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공제사업은 구성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제도.
- 셋째, 참여성(participative) :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도의 설계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비참여적(non-participative)인 방식을 취한다면, 공제사업은 구성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자에게 니즈 서베이를 실시하고, 제도의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도 전체 구성원의 대표가 참여.



## IV. 예술인 공제제도의 구축방안

### 1. 예술인공제회 가입 범위 및 규모

#### 1) 가입 범위<sup>2)</sup>

##### (1) 공제회 가입 대상 범위

□ 신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제회 가입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광의의 ‘문화인’에는 언론 및 종교 분야 종사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협의의 ‘예술인’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활동 종사자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 앞에서 예술인의 개념을 장황하게 살펴본 이유도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

□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제시된 ‘문화예술’의 개념을 원용하는 방안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에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의 장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좁은 의미의 ‘예술’로 분류하기 어려운 ‘어문’과 ‘출판’을 제외하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의 10장르를 예술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근거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가입 대상 범위는 “문학, 미술(응용

---

2) 이에 대해서는 예술인공제회의 선행 연구인 박영정,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규정해 볼 수 있으며, 좀더 범위를 좁혀서 ‘예술인’으로 한정할 경우,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의 10장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여기에서 창작예술가 및 실연예술가 외에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기획·경영인력, 행정·관리인력, 기술인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 (2) 가입 대상에 따른 공제회 유형

- 앞에서 본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과 좁은 의미의 ‘예술’, 또는 넓은 의미의 ‘문화’의 개념 범위를 고려하여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가입 대상을 기준으로 공제회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17〉 가입 대상에 따른 공제회 유형

유형	해당 분야				성격	비고
가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출판	문화기관, 문화산업체	문화예술인 공제회	
나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출판		문화예술인 공제회	문예진흥법 제2조
다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예술인 공제회	
라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예술인 공제회	

- (가형)은 문화예술진흥법상 12개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연구기관 등 문화기관과 게임산업·콘텐츠산업·신문사·방송사 등 문화산업체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이다. 가장 넓은 범위를 갖는 공제회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대상 범위 내부의 동질성이 약하는 것이 약점.
- (나형)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개념을 적용하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및 출판 등의 12개 분야 종사자

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이다. 비교적 광의의 범위를 갖는 공제회에 해당하나 10장르의 예술인 외에 ‘문화’의 범위를 어문과 출판에만 제한하는 논리적 근거가 취약한 것이 약점.

- (다형)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개념 가운데 좁은 의미의 예술로 분류하기 어려운 어문 및 출판을 제외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및 연예 등 10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이다. 예술 개념의 분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장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공제회’로서 가장 현실적 분류에 근거.
- (라형)은 문화예술진흥법상 10개의 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산업적 성격이 강한 영화와 연예를 제외한 8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이는 영화와 연예 분야를 ‘예술’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취약하지만, 구체적인 직업 활동의 매커니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제회 설계에서 별도의 분리된 유형도 가능.

- 공제회 사업 규모를 위해서는 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가장 광의의 모델을 취할 수 있으나 공적 재원을 통한 수혜 구조나 직업적 동질성 확보를 고려할 때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그 대상 범위가 넓은 가형이나 나형의 ‘문화예술인공제회’보다는 그 대상 범위가 좁은 다형이나 라형의 ‘예술인공제회’가 구체적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가입 대상 예술인 규모

- 단일한 예술인 조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등록회원수는 15만 8천여명(2005.12 현재)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연예와 영화 부문을 제외하면 대략 6만 여명으로 추산.
- 그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회원이나 두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예술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20만에서 최대 30만 명까지로 추정. 그 경우 영화나 연예부문을 제외하면 10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정.
- 한국센서스(200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표준산업분류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총 334,67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91,944명)과 기타 오락관련 산업(121,069명)의 213,013명을 제외하면 영화·방송·공연·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121,661명으로 추산.

- 같은 2000년 한국센서스에서 표준직업분류상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및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중 문화예술 관련 직업군의 종사자 규모를 보면 전문가 167,536명, 준전문가 10,075명으로 모두 177,611명 집계.

〈표 18〉 한국센서스에 의한 문화예술인 규모

(단위 : 명)

직업 분류	취업자	남자	여자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5,130	2,290	2,840
작가 및 관련 전문가	45,722	25,501	20,221
창작 및 공연예술가	102,041	52,016	50,025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14,643	10,922	3,721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10,075	6,720	3,355
합계	177,611	97,449	80,162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재구성.

- 한편 2002년부터 연간 직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통계(『직업지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수는 연간 30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기에는 방송, 영화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예술계 강사가 13만 명 내외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술 스태프와 기획 스태프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므로, 순수한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만 집계하는 경우 그 수는 대폭 축소될 수 있음.

〈표 19〉 직업지도에 나타난 문화예술인 직업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6,530	7,812	7,292	11,167	11,856
행사기획자	8,238	10,243	4,792	11,879	7,472
예술계 강사	138,335	147,011	131,570	129,985	126,889
작가	13,669	15,323	17,028	16,569	13,799
번역가	8,067	13,561	11,359	10,019	8,375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출판물기획전문가	5,250	7,720	8,557	11,743	5,033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18,563	15,775	12,476	20,829	19,506
학예사 및 문화재보존원	3,696	2,867	2,272	3,135	3,72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1,927	11,622	10,380	15,039	10,047
화가 및 조각가	5,590	11,446	10,291	7,863	5,653
지휘,작곡 및 연주가	12,156	7,372	13,678	9,610	12,762
무용가 및 안무가	3,616	0	1,131	0	0
사진가 및 사진기자	3,194	4,105	20,149	29,364	25,671
국악 및 전통예능인	2,196	4,120	2,892	3,079	1,159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11,688	10,473	12,390	12,256	9,648
감독 및 연출자	9,131	14,348	10,785	8,402	10,440
연기자	4,971	5,862	3,605	5,090	3,402
영화, 연극 및 방송 기술감독	2,350	3,188	3,239	5,423	3,090
촬영기사	16,515	22,720	8,766	7,391	6,759
음향 및 녹음기사	6,715	6,718	6,254	6,112	3,786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6,129	5,681	3,807	3,434	5,122
조명기사	3,069	4,262	2,873	2,684	2,020
기타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기술직	11,551	6,892	9,808	5,176	4,348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	5,729	2,218	4,657	3,592	3,976
합계	318,876	341,340	320,051	339,842	304,536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지도』 (2003~2007)에서 재구성.

-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만 집계하는 경우 2003년, 2004년에 10만 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6년도엔 7만 5천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예술인의 수가 줄어든 직접적 요인은 사진가의 수가 대폭 감소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0〉 직업지도에 나타난 예술인 직업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작가	13,669	15,323	17,028	16,569	13,799
번역가	8,067	13,561	11,359	10,019	8,375
화가 및 조각가	5,590	11,446	10,291	7,863	5,653

지휘, 작곡 및 연주가	12,156	7,372	13,678	9,610	12,762
무용가 및 안무가	3,616	0	1,131	0	0
사진가 및 사진기자	3,194	4,105	20,149	29,364	25,671
국악 및 전통예능인	2,196	4,120	2,892	3,079	1,159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11,688	10,473	12,390	12,256	9,648
감독 및 연출자	9,131	14,348	10,785	8,402	10,440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	5,729	2,218	4,657	3,592	3,976
합계	75,036	82,966	104,360	100,755	91,483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지도』 (2003~2007)에서 재구성.

- 한편 예비 예술인에 해당하는 예술계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자수는 연간 4만 7천 명에서 4만 8천명 선으로 5년에 총 25만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몇 % 정도가 직업 예술인으로 정착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술인의 규모를 파악하는 주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표 21〉 예술계 대학/전문대학 학과 및 졸업생 현황

구분	학과수(개)				졸업생수(명)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예체능교육	53	50	49	45	1,585	1,672	1,529	1,679
디자인	896	972	1,050	999	24,573	24,767	24,856	22,659
공예	57	71	71	74	1,516	1,179	1,172	1,521
사진, 만화	112	123	127	119	2,290	2,577	2,542	2,375
영상 예술	126	153	168	192	2,534	2,473	3,189	3,273
무용	58	63	70	58	1,338	1,287	1,200	1,218
미술, 조형	190	202	205	195	4,475	4,312	4,253	4,299
연극, 영화	83	102	98	110	1,367	1,590	1,555	1,653
음악(국악포함)	291	316	314	324	8,508	8,490	8,449	8,488
계	1,866	2,052	2,152	2,116	48,186	48,347	48,745	47,16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4~2007에서 재구성.

전문대학, 대학교 통계만 합산한 결과임(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제외).

-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통계를 종합해 보면 좁은 의미의 예술인은 최소 7만 5천 명에서 최대 20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에서 35만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음.

- 좁은 범위의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잠재적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 인구는 대략 10만명에서 15만명 정도로 산정해 볼 수 있음.

### 3) 가입자격 및 기준

□ 가칭 ‘예술인공제회’에 공적 재원이 일부나마 지원된다면 그 가입 자격이 엄격하고 또 명료해야 하나 다양한 형태를 가진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 일반적인 의미의 예술인의 정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설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의나 기준이 필요. 예술인공제회와 관련하여 가장 근접하는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전개한 적이 있는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적 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

□ 앞에서 살펴본 예술인의 정의를 참고하여 가칭 ‘예술인공제회’의 가입 자격 및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직업 예술인 단체의 멤버십을 가진 예술인 : ‘예술인공제회’ 가입 당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공공예술기관이나 민간영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의 단체나 협회 소속 예술인의 경우 기관이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회원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음. 다만 임의 단체로 조직되어 운영 중인 예술인 단체는 제외.
- ② 일정 수준의 예술적 산출물을 산출한 예술인 : ‘예술인공제회’ 가입 전 3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음. 세부적인 활동기준에 대해서는 장르별로 기준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③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 예술인 : ‘예술인공제회’ 가입 전 3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직업적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음. 연평균 소득액이나 3년 소득 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④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인의 자격을 판정 : ‘예술인공제회’에 회원 가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자격심사위원회(전문가 및 예술인으로 구성)를

설치하여 공제회에 가입 신청을 한 예술인에 대해 심의하여 자격을 인준하도록 함. 앞의 ①, ②, ③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예술인공제회’ 가입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자료의 판정이 애매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술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방식만으로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따라서 이 네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①, ②, ③ 중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④를 통해 판정한 경우에 모두 가칭 ‘예술인공제회’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2. 유니버설 공제 (universal mutual aid)

### 1) 유니버설 공제제도의 특징

-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보험형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 대한 반영키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 형태.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은 다른 보험계약 이 추가로 필요없으리만큼 신축성이 높으며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이 명확히 구분 되어 있고, 저축부분이 유리한 이자율로 신축성있게 저축될 수 있으며 세계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유니버설보험은 여러 보험자가 각기 다른 이름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무배당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변 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등을 변수로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
  - 따라서 유니버설보험의 현금가치는 가변적이며 보험자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 이자율만 확정·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을 감안한 실제이자에 따라 조정하게 됨.
- 또한 저축성부분에 대해선 종래의 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에 준하는 약관대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부분인출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의 변경은 진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받게 될 주계약의 액면가를 높일 수도 있음.



- 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변경과 아울러 보험료 납부도 중단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 시 회사는 그 계약의 저축부분으로부터 보장과 사업비 부분의 비용을 공제하게 됨.

□ 유니버설(Universal)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이다.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조정 가능한 사망공제금, 개별적인 가격구조, 완전 공시 그리고, 비용상 이점 등이 해당된다. 공제계약자의 변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유니버설공제의 유연성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험형태의 유니버설보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 이 공제의 계약자는 공제료의 납입시기와 납입액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공제계약자는 공제료를 납입하거나 가격을 다르게 내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음. 이 유연성을 위한 납입상의 유일한 제약은 캐쉬밸류가 다음달 필요한 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한다는 것임.

□ 또한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사망공제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자녀를 둔 가정은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일반적으로 보장이 더 필요.

- 그러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가정의 공제의 필요성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버설의 개별 가격구조는 공제계약이 그 구성 요소별로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 그래서, 공제계약자는 정확하게 납입한 공제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음.

□ 유니버설 공제의 또하나의 특징은 투명성이다.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캐쉬밸류가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회사는 또한 한해 동안 공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보내준다. 캐쉬밸류, 보험금, 부분적인출, 공제료납입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음.

- 공제계약자는 자신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있게 됨. 이 유니버설 공제의 보고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보험을 위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

□ 사람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매월 꼬박꼬박 공제료를 내야 하고 오랫동안 그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점.

- 급한 일로 보험계약을 깰라치면 막심한 원금손실도 불가피. 유니버설보험은 이러한 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 기존 종신보험의 약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보험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생명보험 계약의 절반 정도가이 유니버설 보험.
-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계 메트라이프생명이 처음 상품을 낸 이후 국내사에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외국계에서는 PCA생명과 AIG생명이 도입.

## 2) 유니버설 보험이론

### (1) 기원과 배경

□ 현재 형태의 Universal 보험이 최초로 도입, 판매된 것은 1979년 E.F. Hutton Life사(현재 Life of California사).

- 1980년대 전반에는 고금리라고하는 순풍도 있었고, 신계약에 점유하는 비율(연 납환산보험료기준)은 1985년 38%까지 급속하게 확대되어, 전통적 종신보험(1980년 82%에서 1985년 33%까지 저하)을 초과하였다. 그 이후는 금리저하도 있었고, 전통적 종신보험 혹은 변액 Universal 보험으로 이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력상품임에는 변화가 없음.

### (2) 상품의 특징

Universal 보험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음

가. 보험의 자재성(自在性)

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시기와 금액이 계약자의 자유라는 것

나. 투자 지향성

Cash Value에 시중금리 수준의 금리를 부여하고 타 금융상품과 대항 가능한 것

## 다. 분리성(Unbundling)

사망보장과 저축이 분리(Unbundle)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로서는 투명하다는 것

### 3) 유니버설보험의 공제에의 적용

□ 자유입출금의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을 공제제도에 활용하되 공제회의 성격에 맞도록 재설계하도록 함.

- 공제료의 납입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이 발생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납입된 금액에 대한 인출은 실업시 실업급여, 재해 혹은 질병 발생시 상병급여, 은퇴후 노령급여 등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실업급여와 상병급여는 불입한 금액의 50%에 한정하여 지급함.
- 장해급여, 사망급여, 상해시 치료비용 등 상해보험적 성격의 급여는 별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함.

□ 실업공제급여 (상병급여도 동일한 조건)

-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 그러나 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형법이나, 직무관련 법규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저임금의 50%를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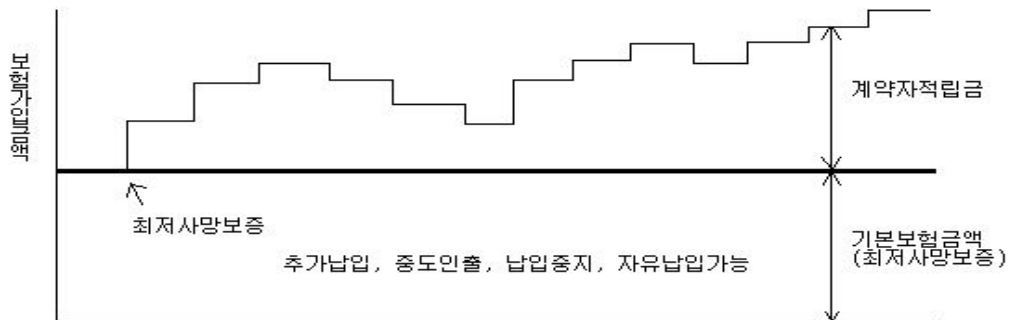
〈표 22〉 가입기간별·연령별 지급일수

연령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표 23〉 상해공제급여

가입기준	보장내용
재해사망보험금	피공제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단,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율이 80%이상의 장애상태 제외)
일반사망보험금	피공제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단,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율이 80%이상의 장애상태 제외)
재해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text{사망보험금액} = \text{기본보험금액} + \text{계약자적립금}$$



☐ 이자소득세 100% 전액 비과세

- 공제계약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15.4% 전액 비과세 상품화

☐ 적립성 공제는 다음의 절에서 별도 제시

### 3. 적립성 공제 상품의 개발

#### 1) 상품개발 과정

##### (1) 1단계 : 예정기초율의 결정

- ☐ 공제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 예정이율(할인률), 탈퇴(퇴직률), 사업경비율 등의 산출 또는 결정

##### (2) 2단계 : 보장금액 및 보장공제료 결정

- ☐ 보장공제료는 출연계정에서 충당
- ☐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하여 결정

##### (3) 3단계 : 적립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 ☐ 적립공제료는 구좌 단위로 개인납입공제료로 함
- ☐ 책임준비금은 “개인납입보험료+기본이자+장려금“으로 산출

#### 2) 상품의 설계

##### (1) 보장부문

- ☐ 일반사망공제금
  - 공제기간중 사망시 지급키로 약정한 일반사망공제금
- ☐ 재해사망공제금
  - 공제기간중 재해사망시 지급키로 약정한 재해사망공제금
- ☐ 만기공제금

- 사망 또는 상해등으로 탈퇴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생존시 지급하는 적립금

☐ 공제기간중 사망 또는 상해이외의 탈퇴시 탈퇴시점 적립준비금

☐ 사망 또는 상해로 탈퇴시 해당 사유별 공제금과 탈퇴시점 적립준비금

## (2) 주요 기본가정

☐ 보장부분과 저축부분을 분리 운용

- 보장부분은 출연계정부분에서 충당
- 개인납입공제료는 저축부분으로 운용

☐ 예정위험률은 민간생명공제회사의 제3회경험생명표를 적용

- 배당공제사망률, 개인연금사망률, 재해사망률

## (3) 예정기초율

☐ 예정위험률

- 민영공제에서 적용하고 일반사망률, 재해사망률 적용(별첨참조)

☐ 예정이율

- 보장부분, 적립부분의 예정이율을 6.8%로 가정

☐ 예정탈퇴률 : 연도별

- 연간 평균 퇴직율은 8%로 가정하였음.

☐ 예정사업경비율 : 보장공제료의 10.0%

## 3) 세부설계(안)

☐ 적립성 공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보장성 공제로 보완.

- 적립성 공제는 1구좌 월 10,000을 기준으로 운영함.
- 보장성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립성 공제에 비례하여 보장하도록 운영하되 보장 공제료는 별도로 산정함.

☐ 퇴직 시에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타 공제회와는 달리 단기 가입 시에도 시장금리 보장.
- 연금은 종신행과 10년 확정형 등 가입자의 편의에 부응하여 다양하게 운영

☐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 양양의 차원에서 보장 공제료 중 일부 혹은 전부의 지원, 적립성 공제에 대한 저축장려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장기 가입자일수록 저축장려금의 지급율을 높임.
- 보장공제는 재해사망 시와 일반사망 시로 구분하여 보장하되 재해사망 시의 보장금액을 높임.

#### 4) 공제료 및 연금액 예시

(1) 보장부문(10구좌 기준)

☐ 재해사망공제금 : 5,000 만원

☐ 일반사망공제금 : 200 만원

〈표 24〉 월납공제료(10구좌기준)

(단위 : 원)

구 분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보장기간	35년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5년
남 자	5,202	5,270	5,785	6,592	7,350	8,664	9,364
여 자	1,575	1,757	1,940	2,215	2,475	2,916	3,165

(2) 적립부문

□ 구좌기준 : 1구좌는 월납입공제료 10,000원

〈표 25〉 만기금액 및 연금액 예시(10구좌 월 10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5세	35세	45세	55세
납 입 기 간	35년	25년	15년	5년
총 납 입 액	42,000	30,000	18,000	6,000
기본이자	164,671	76,476	30,788	7,127
장 려 금	10,362	2,322	320	8
일 시 금	175,033	78,793	31,108	7,135
확정연금액	23,119	10,407	4,109	942
종신연금액(남자)	17,024	7,663	3,026	694
종신연금액(여자)	14,770	6,649	2,625	602

※ 장려금은 공제수익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표 26〉 경과기간별 중도지급율 예시 (10구좌 월 10만원)

(단위 : 천원)

경과기간	납입액	지급액	지급율	(기본율)	(장려율)
1 년	1,200	1,244	1.037	(1.037)	(0.000)
3 년	3,600	3,992	1.109	(1.109)	(0.001)
5 년	6,000	7,127	1.189	(1.188)	(0.001)
7 년	8,400	10,702	1.277	(1.274)	(0.003)
10 년	12,000	17,029	1.426	(1.419)	(0.006)
15 년	18,000	30,788	1.728	(1.710)	(0.018)
20 년	24,000	49,906	2.119	(2.079)	(0.039)
30 년	36,000	113,383	3.291	(3.150)	(0.142)

※ 장려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금으로서 공제사업 수입성과에 따라 상향



〈표 27〉 경과기간별 중도지급율 예시 (10구좌 월 10만원)

(단위 : 천원)

년수	불입액	기본금	장려이자	장려금	환급금	기본금지급율	장려금지급율	지급율
1	1,200,000	1,244,200	0.0003	163	1,244,363	1.037	0.000	1.037
2	2,400,000	2,573,006	0.0005	1,121	2,574,126	1.072	0.000	1.073
3	3,600,000	3,992,170	0.0008	3,615	3,995,785	1.109	0.001	1.110
4	4,800,000	5,507,838	0.0010	8,507	5,516,344	1.147	0.002	1.149
5	6,000,000	7,126,570	0.0013	16,793	7,143,364	1.188	0.003	1.191
6	7,200,000	8,855,377	0.0015	29,625	8,885,002	1.230	0.004	1.234
7	8,400,000	10,701,743	0.0018	48,326	10,750,069	1.274	0.006	1.280
8	9,600,000	12,673,661	0.0020	74,412	12,748,073	1.320	0.008	1.328
9	10,800,000	14,779,670	0.0023	109,618	14,889,288	1.368	0.010	1.379
10	12,000,000	17,028,888	0.0025	155,920	17,184,808	1.419	0.013	1.432
11	13,200,000	19,431,052	0.0028	215,568	19,646,621	1.472	0.016	1.488
12	14,400,000	21,996,564	0.0030	291,117	22,287,681	1.528	0.020	1.548
13	15,600,000	24,736,530	0.0033	385,460	25,121,990	1.586	0.025	1.610
14	16,800,000	27,662,814	0.0035	501,873	28,164,688	1.647	0.030	1.676
15	18,000,000	30,788,086	0.0038	644,056	31,432,142	1.710	0.036	1.746
16	19,200,000	34,125,876	0.0040	816,180	34,942,056	1.777	0.043	1.820
17	20,400,000	37,690,635	0.0043	1,022,947	38,713,582	1.848	0.050	1.898
18	21,600,000	41,497,798	0.0045	1,269,643	42,767,442	1.921	0.059	1.980
19	22,800,000	45,563,849	0.0048	1,562,212	47,126,060	1.998	0.069	2.067
20	24,000,000	49,906,390	0.0050	1,907,322	51,813,713	2.079	0.079	2.159
21	25,200,000	54,544,225	0.0053	2,312,455	56,856,680	2.164	0.092	2.256
22	26,400,000	59,497,432	0.0055	2,785,989	62,283,421	2.254	0.106	2.359
23	27,600,000	64,787,458	0.0058	3,337,303	68,124,761	2.347	0.121	2.468
24	28,800,000	70,437,205	0.0060	3,976,888	74,414,093	2.446	0.138	2.584
25	30,000,000	76,471,135	0.0063	4,716,467	81,187,602	2.549	0.157	2.706
26	31,200,000	82,915,372	0.0065	5,569,131	88,484,503	2.658	0.178	2.836
27	32,400,000	89,797,817	0.0068	6,549,490	96,347,307	2.772	0.202	2.974
28	33,600,000	97,148,269	0.0070	7,673,837	104,822,105	2.891	0.228	3.120
29	34,800,000	104,998,551	0.0073	8,960,330	113,958,881	3.017	0.257	3.275
30	36,000,000	113,382,652	0.0075	10,429,199	123,811,852	3.150	0.290	3.439
31	37,200,000	122,336,873	0.0078	12,102,964	134,439,837	3.289	0.325	3.614
32	38,400,000	131,899,980	0.0080	14,006,684	145,906,664	3.435	0.365	3.800
33	39,600,000	142,113,379	0.0083	16,168,232	158,281,610	3.589	0.408	3.997
34	40,800,000	153,021,288	0.0085	18,618,590	171,639,878	3.751	0.456	4.207
35	42,000,000	164,670,936	0.0088	21,392,190	186,063,126	3.921	0.509	4.430
36	43,200,000	177,112,760	0.0090	24,527,278	201,640,037	4.100	0.568	4.668
37	44,400,000	190,400,627	0.0093	28,066,315	218,466,943	4.288	0.632	4.920
38	45,600,000	204,592,070	0.0095	32,056,436	236,648,506	4.487	0.703	5.190
39	46,800,000	219,748,531	0.0098	36,549,934	256,298,464	4.695	0.781	5.476
40	48,000,000	235,935,631	0.0100	41,604,814	277,540,445	4.915	0.867	5.782

#### 4. 예술인공제회의 재원조달

- ☐ 예술인공제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제회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부담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파이를 크게 형성하여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제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본적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연금상품을 핵심으로 하고, 거기에 자녀교육에서부터 최후의 장례서비스까지 다양한 생활보조 상품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규칙한 소득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제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부담금 납부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월정액 납부 방식 외에 일시납이나 현물납입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 공제회 운영경비(인건비, 경상비 등)의 안정적인 마련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적 재원에서의 보조나 자체 사업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구체적인 상품의 설계 및 개발은 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설립준비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 시행은 공제회가 설립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예술인연금에 부가적인 장려금의 지급과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적 재원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상품 개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가칭 ‘예술인공제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되기까지 국고에서 출연하는 방안이나 문예진흥기금이나 복권기금, 토토적립금 등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경로는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를 통한 지원이나 문화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공제회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표 28〉 유사공제회 정부보조금 관련조항

법률명	정부 보조금 관련조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지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한다.
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경찰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 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

- 예술인 공제회의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문예진흥기금과 같이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권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조달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기금 중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재원조달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공제회 재원조달 원칙에 있어 문예진흥기금을 벤치마킹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역할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신설될 공제회와 역할측면에서 중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역할분담과 소요 재원의 분할에 필요한 제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문예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관리하고 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 17조)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20·21조)
-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공연장·박물관·미술관·사적지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여 모금(19조)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 중의 일부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출연
-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은 예술인 공제회의 재원조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방법일 것이다.
- 문예진흥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에 이용한다.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하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의 지원에 사용한다.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 문예진흥기금의 용도 중 예술인 공제회가 신설될 경우 역할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공생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

☐ 공생적 역할분담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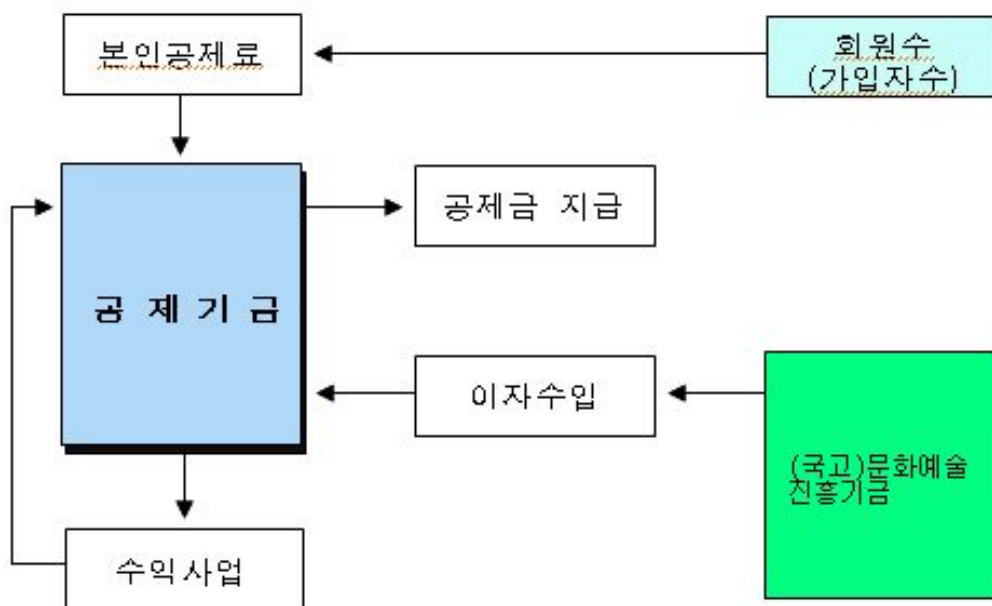
- 재원분할 및 역할분담에 있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예술인 공제회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 이는 문예진흥기금의 용도 중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부문은 예술인 공제회가 신설될 경우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회의 역할에 반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출규모 역시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국고지원은 공공부문을 통한 재원이라는 점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가 경제 및 경기순환에 따라 불안정하게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공재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으로 그 지속가능성이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공익사업인 예술활동의 상업화 작업을 통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의 발굴과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공제회 스스로 보조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조·자립의 원칙이 필요하다.

☐ 가입자의 공제료와 예술진흥기금의 출연을 받아서 별도의 공제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년 200억원씩 출자하여 1,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여 본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보장성 공제급여의 비용을 충당
- 정부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비의 일정을 (예 1%)를 각출하여 예술인의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
- 문화예술진흥비의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국고차원의 확충이 필요함.



[그림 4] 예술인공제 기금과 자산운용의 관계

## 5. 공제회 사업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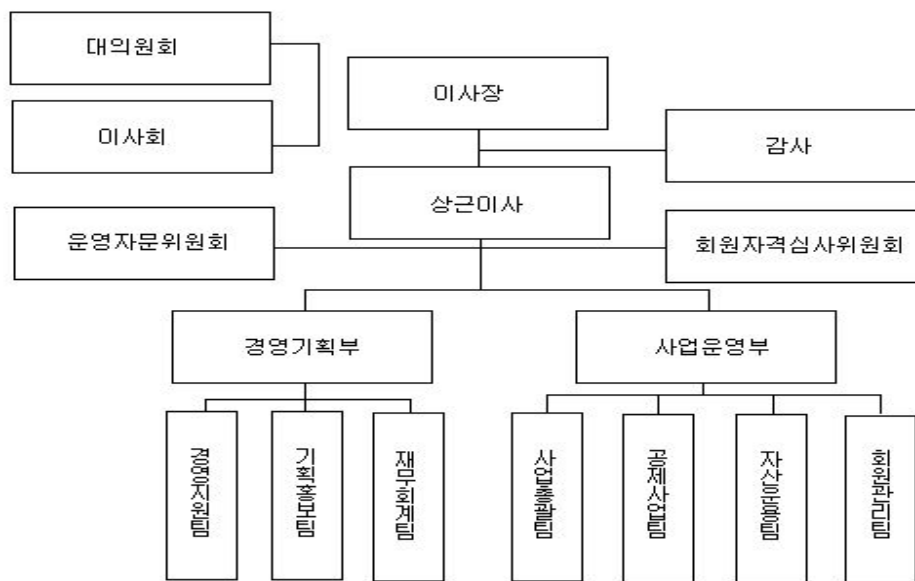
□ 예술인 공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합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중요. 전달체계의 적합성 기준은

- 첫째,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둘째, 대상 예술인에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함.
- 셋째, 관리업무가 간편하여야 함.
- 넷째, 관리비용이 적어야 함.
- 다섯째, 장기적으로 본 사업의 단계적 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함.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독립적인 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문화예술관련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 1 안 : 공제회 신설방안 (박영정 박사안) >



[그림 5] 문화예술인공제회 조직 구성도

□ 공제회의 조직은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와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모든 의사결정은 대의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하되 공제회의 대표성은

이사장에 있고, 실질적인 업무 총괄은 상임 이사가 담당하도록 함.

- 운영자문위원회와 별도로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 경영기획부 : 내부적으로는 조직, 규정, 경영방침, 각종 업무의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대 정부관계 업무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조, 홍보업무 등을 담당함.

- 경영지원팀 : 조직 및 인사, 규정, 경영방침, 각종 업무의 총괄 조정업무 담당
- 기획홍보팀 : 업무 추진전략, 정부관계 업무 및 대외기관과의 협조, 홍보 업무 담당.
- 재무회계팀 : 재정부분 업무 담당, 예산, 회계, 계약 등 업무 담당

□ 사업운영부 : 공제회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추진, 자원 조성 및 자산 관리·운용을 담당하고 그 외 회원관리를 포함하여 업무를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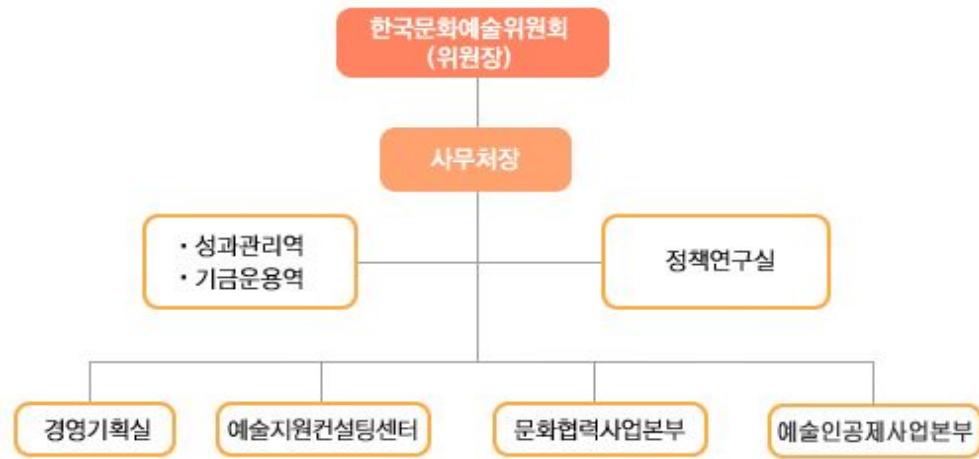
- 사업총괄팀 :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행정적 필요 사항 지원하고 문화여가복지사업을 담당
- 공제사업팀 : 공제회의 사업을 개발, 추진, 수행하는 팀으로서 ‘문화예술 인연금’(적립형공제급여사업) 급여 지급 등 업무 담당
- 자산운용팀 : 기금 및 자원 조성, 자산 운용 등의 업무 담당
- 회원관리팀 : 회원 관리 및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담당

## <2 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부 조직화하는 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사무처 산하에 예술인공제사업본부를 두는 방안

- 독립사업조직의 사업운영부서만 운영하면 됨.
- 별도의 공제회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조직 및 경상비 소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관련 각종의 공공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하는 주체라는 점이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그림 6]

<표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 구성

(2008. 6월 30일 현재)

구 분	임원	사무처장	일반직	계
정 원	2	1	122	125
현 원	2	1	116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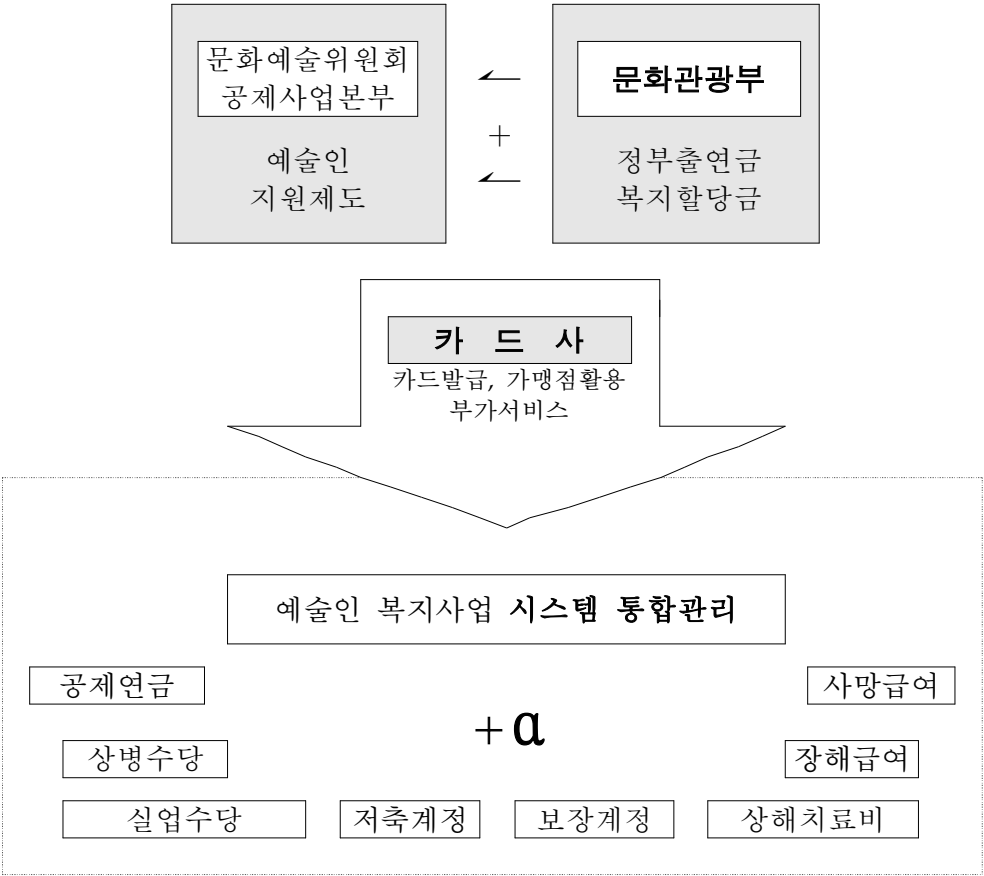
□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카드사 활용방안

□ 전달체계의 구축의 핵심은 공제료의 징수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전달하느냐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업복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드사 이용방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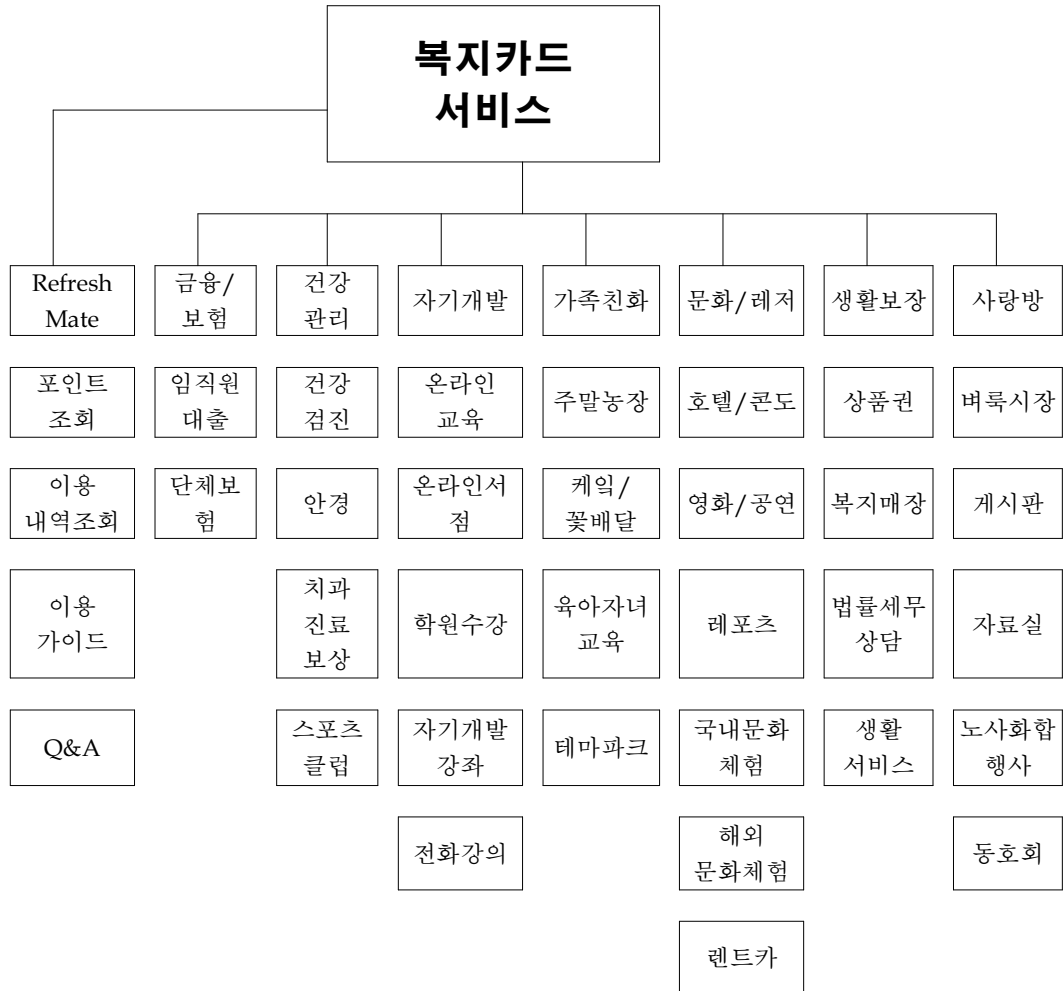
- 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공제사업을 다양한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발전성이 좋다는 점, 셋째, 관리 행정상으로도 대부분의 관리업무는 카드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거의 추가적

비용지급없이 시행가능하다는 점, 또한 카드사의 가맹점은 자연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 예술인 전달체계로서 예술인복지카드를 채택함으로써 예술인공제사업은 새로운 차원의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예술인을 위한 각종의 공제사업을 매우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이에 더하여 카드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림 7] 예술인 공제조합 운영 Flow



## 6. 법률안 개정방법 검토

- ☐ 문화예술진흥법 제 18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 제 5항에 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예술인을 위한 각종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또한, 공제사업이 단순한 상조회적 성격을 넘어서 기금확보를 통한 수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공제회 및

군인공제회와 같이 법률의 근거를 통해 공제사업의 합법성 및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예술인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39조를 신설하여 예술인공제사업을 규정

☐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공제사업의 법적 위상, 사업내용, 재원조달방안 등이 있음

☐ 제39조(예술인공제사업) ①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공제사업을 시행한다.

②공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공제사업본부를 둔다.

③공제사업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공제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상해 공제사업
2. 의료비용 공제사업
3. 적립식저축 공제사업
4. 퇴직연금 공제사업
5.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공제사업
6. 주거복지 사업
7. 복지후생 사업
8.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⑤공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회비를 기초로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하되, 문화예술인진흥기금의 출연, 국고 혹은 지방비,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민간의 기여금과 운영수익으로 운영한다.